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 출장 개요

출장목적

- 2025년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-Economics 학회(SASE2025) 발표 및 격차 해외 전문가 네트워킹

과제명

- [수탁25-011-11]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

출장기간

- 2025.7.9.(수)~7.14.(월)

출장국가(도시)

- 캐나다(몬트리올)

출장자

- 김성아 부연구위원

일정요약

일자	국가(도시)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활동상황
7/9(수)	국가 간 이동	대한민국(인천) -미국 (미니아폴리스) -캐나다 (몬트리올)		
7/10(목)	캐나다(몬트리올)	SASE 2025 (Palais des Congrès)	- Lorenza Antonnuci (University of Birmingham) 등 - Solhee Han (Oxford University)	- 세션 참석 및 전문가 면담 (Gender equality and inequality / Intersectionality of Insecurity / Men, fathers and family commitment / World of Insecurity) - 세션발표(Young People Navigating Insecurity)
7/11(금)	캐나다(몬트리올)	SASE 2025 (Palais des Congrès)	- Pugliese Maude, INRS - Marlies Glasius	- 자산 성별 격차 전문가 면담(INRS) - 세션 참석 및 전문가 면담 (Social reproduction labour and youth / Tax

			(University of Amsterdam) - Jun Ho Jeong (Kangwon National University), Byung You Cheon (Hanshin University) 등	policy and redistributive challenges / Inequality and growth in contemporary capitalism)
7/12(토)	캐나다(몬트리올)	SASE 2025 (Palais des Congrès)	- Timo Wiesner (University of Bremen) - Héctor Ríos-Jara (Universidad Central de Chile), Smitha Radhakrishnan (Wellesley College) 등	- 세션 참석 및 전문가 면담 (The changing politics of economic inequality / Social class and finance)
7/13(일)-7/14(월)	국가 간 이동	캐나다(몬트리올)-토론토)-대한민국(인천)		

2 출장 주요내용

①	국가 간 이동
일시	2025.7.9.(수)
장소	한국(인천) → 미국(미니애폴리스) → 캐나다(몬트리올)
참석자	김성아 부연구위원
인천공항 출국, 미국(미니애폴리스) 경유 및 캐나다(몬트리올) 공항 입국	
②	세션 참석 및 전문가 면담, 세션 발표
일시	2025.7.10.(목)
장소	캐나다(몬트리올, Palais des Congrès)
참석자	김성아 부연구위원
<input type="checkbox"/> Gender equality and inequality / Men, fathers and family commitment	

- 미국 주정부와 소득 불평등, Chalem Bolton (University of Michigan, Ann Arbor, MI, USA)
 - 연방 정부의 교착 상태 속에서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재분배 정치의 핵심이 됨.
 - 기존 연구는 주정부가 노동시장 임금 분포(임금 불평등)를 조절해 가계소득 불평등을 줄인다고 설명했지만,
 - 가계소득 불평등은 이제 임금 불평등과는 따로 움직임.
 - 가족 구조 변화, 노동 공급 패턴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 개입 효과는 제한적.
 - 대신 자유주의(진보) 성향의 주정부는 여성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‘일-가정 양립 정책’을 통해 가계소득 불평등을 낮춤.
 - 특히 유급 육아휴직 등은 여성,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저소득 가계소득을 끌어올림.
 - 실증 분석(1998~2017년 데이터)은 임금 압축보다 노동공급 증가(특히 여성)가 불평등 완화에 더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줌.
 - 벨기에 아버지 역할 연구, Bernard Fusulier (UCLouvain, Louvain-la-Neuve, Belgium) 외
 - 최근 아버지들이 자녀 돌봄과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,
 - 그 참여 방식은 가정과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함.
 - 프랑스어권 벨기에에서 아버지 21명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수행하여,
 - 아버지가 스스로 인식하는 역할과 보건·사회 지원 전문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석.
 - 연구 결과, 아버지의 역할 인식과 전문가에 대한 기대는 네 가지 ‘이상적 유형’으로 나뉨.
 - 영유아 전문가들은 아버지의 다양한 기대와 역할 인식을 이해하고,
 - 그에 맞게 상호작용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.
- Intersectionality of Insecurity / World of Insecurity
- 저소득 노인의 사회적 시민권과 회복탄력성
 -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은 노인의 사회적 시민권(social citizenship) 실현을 위협하고, 나이 들수록 노동시장 접근은 줄고 건강·돌봄 비용은 늘어나며, 사회적 고립까지 겹쳐 복합적 취약성이 커짐.
 - 개인의 안전성(기본 욕구 충족)과 자율성(행위역량)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. 하지만 고령층은 행위역량이 한계가 있어 공공지원·시민사회·가족 네트워크가 이를 보완해야 함.
 - 노르웨이·독일처럼 관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국가는 연대 기반이 탄탄해 회복탄력성이 높음. 에스토니아·헝가리는 공공지원이 약해 가족 의존도가 높음.
 - 노인이 ‘능동적 시민권’을 실현하려면 적극적(active) 복지국가가 기본 안전망을 제공해야 함.

○ 유럽 청년·노인의 주관적 경제 불안정성

- 금융위기·코로나·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쇄적 위기는 유럽인들의 미래 고용·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높임.
-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지만, 인생주기 상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덕에 노인보다 덜 불안하다고 느낌. 다만 아이가 있는 청년은 불안도가 높음.
- 사회민주주의 국가(스칸디나비아 등)는 주관적 불안정성이 가장 낮음. 남유럽·중동유럽은 위기 후에도 불안정성이 높게 지속됨.
- 복지국가의 안전망은 개인의 미래 불안정성 완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, 사회정책은 위기 시기에 더 중요

○ 여성(특히 어머니)의 실업과 돌봄 불안정성, Janine Leschke (Copenhagen Business School, Frederiksberg, Denmark) 외

- 비정규·단시간 고용에 종사하는 여성은 실업급여(UIB)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위기 시 불안정성이 커짐. 돌봄 책임이 많은 어머니는 실업 시 돌봄 지원(보육·유급휴가)에서 배제되기도 함.
- 고용 중심 복지국가(독일·네덜란드)는 미니잡·가사노동자 등 여성을 다수 포함한 비정형 노동이 실업급여에서 배제됨. 덴마크(보편주의) 등은 상대적으로 포괄적.
- 실업급여와 돌봄정책의 연계를 젠더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진정한 노동시장 연대가 가능.

□ (세션 발표) Young People Navigating Insecurity

○ 청년의 고립·은둔과 불안정성 (한국)

- 경쟁과 사회 파편화로 인해 한국에서는 ‘하이퍼 개인화(hyper-individualisation)’ 속에 고립·은둔 청년층이 빠르게 늘어남.
 - 이들은 경제활동 중단,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, 가정·사회 지원 부족으로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임.
 - 가족 해체, 관계 갈등, 구직 실패가 고립을 악화시킴.
 - 기본 자기관리조차 어려운 사례 많고, 정신건강 욕구도 충족되지 않음.
 - 고립 청년도 일과 사회기여를 원하지만 저임금·불안정 노동에 머무름.
- 고립·은둔 청년 지원은 관계 회복부터 일 경험, 지역사회 재참여까지 맞춤형·지속적이어야 함.
 - 지역 허브, 공유주택, 멘토링, 낙인 해소 캠페인 등 공동체 기반 자립 지원 필요.

○ 주관적 경제불안정성 (유럽 청년·노년 비교), Zosia Cooper (UC San Diego, USA)

- 금융위기·코로나·전쟁 등으로 유럽인들의 미래 고용·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됨.

- 위기마다 불안정성이 급증했지만, 사회민주주의 국가(북유럽)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.
- 전반적으로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느낌.
- 다만 자녀를 둔 청년은 불안도가 더 높아짐.
-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 복지안전망이 개인의 주관적 불안정성을 완충함.

○ 여성 돌봄자·실업급여의 젠더 격차 (유럽 비교), Rosario Scandurra (Università di Firenze, Florence, Italy, Italy) 외

- 여성(특히 어머니)은 비정규·단시간 노동이 많아 실업급여(UIB) 자격에서 배제됨.
 - 실업이 돌봄 권리(보육, 유급휴가) 상실로 이어져 이중 불안정에 직면.
- 독일·네덜란드(고용중심형) 등은 비표준노동자가 실업급여에서 배제돼 성별 격차가 고착됨.
- 덴마크(보편주의형)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임.
- 국가별 보육제도·근로시간과 연계된 제도 설계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.
- 실업급여·돌봄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불안정성이 완화됨.

③ 세션 참석 및 전문가 면담

일 시 2025.7.11.(금)

장 소 캐나다(몬트리올, Palais des Congrès)

참석자 김성아 부연구위원

□ 자산 성별 격차 전문가 면담(Pugliese Maude, INRS)

○ 결혼과 자산 격차

- Maude Pugliese 교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은 일반적으로 자산 축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, 퀘벡과 같은 사회민주적 복지체제에서는 결혼 프리미엄이 약화됨. 동거(cohabitation)가 발달하고 가족정책이 강화되면 결혼이 더 이상 자산 축적의 필수조건이 되지 않음.

○ 젠더 갈등과 돌봄정책

-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서는 아동 돌봄, 부모휴가, 연금 자산의 성별 격차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. 상속·증여도 계층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남(초고자산가는 사업체, 저자산가는 주택 중심).

○ 데이터 한계와 연구 제안

- 한국은 행정데이터(재산세, 상속세) 활용 필요성이 제기됨. 자기보고식 서베이는 한계가 있으나 보완적 도구로 활용 가치 있음. 퀘벡은 프랑스계 대륙법, 가톨릭 문화 등이 사회정책과 법률에 특수성 제공.

□ Social reproduction labour and youth

○ 일-가정 애정담론과 청년의 '사랑할 만한 일' 찾기 (캐나다), Kiran Mirchandani(University of Toronto, Toronto, ON, Canada)

- 오늘날 청년에게는 '일을 사랑하라'는 담론이 가족·학교·고용주로부터 강하게 주입됨. 그러나 실제로는 저임금·열악한 조건의 아르바이트 등 사랑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모순을 느낌.
- 온타리오 대학생 51명을 인터뷰한 결과, 청년은 열악한 일자리에서도 '사랑할 만한 일'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 내면화함.
- 이는 페미니즘의 '사회적 재생산노동' 개념으로 설명됨: 청년이 불리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면서도 미래에 사랑할 직업을 찾을 준비를 계속함.
- 청년이 감정·가족·교육·일 사이의 긴장을 '사랑할 일 찾기'로 해소하려는 구조를 성찰해야 함.

○ 중국 청년의 탈노동 전략: '躺平(탕핑)'과 '전업 자녀', Monika Arnoštová(Duisburg-Essen University, Duisburg, NRW, Germany)

- 청년 실업률(2023년 21.3%)이 급등하고 '내권(內卷, involution)'으로 경쟁이 심화됨.
- 불안정한 경제와 불확실한 미래가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·지연을 부추김.
- 상하이 청년 30명 인터뷰 결과, 배달·플랫폼노동·추가학위·탕핑('눅기'·무위)·'전업 자녀(全职子女)' 등 다양한 탈노동 전략이 나타남.
- 돌봄·노동·가족 지원의 젠더적 양상도 존재.
- 고학력 청년이라도 과잉경쟁과 경제 불안정 속에서 전통적 경력경로 대신 유연한 탈노동 전략을 실천함.

○ 미국 부모의 청년기 '경제적 지원'과 자립 담론의 모순, Elena van Stee(University of Pennsylvania, Philadelphia, PA, USA)

- 미국 중상층 가정은 성인 자녀에게 교육·주거·결혼 등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. 그러나 '자립해야 한다'는 문화 이상과 충돌.
- 청년 47명+부모 47명 심층 인터뷰 결과, 가족은 자립 서사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'제한적-정당화 전략' 사용.
 - 예: 부모가 비공식 대출, 임대료 부과 후 되돌려주기, 일정액 분담 요구, 선물 포장 등.
- 화이트·블랙·중국계 가족 간에도 차이가 있었음.
- '자립'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 자산 이전과 불평등 재생산이 강화됨.

□ Tax policy and redistributive challenges

○ New Fiscal Sociology & 미국 조세 신뢰 위기, Seiichiro Mozumi(Yokohama National University, Yokohama, Kanagawa, Japan. University of California, Santa Barbara, Santa Barbara, California, USA)

- '새로운 재정사회학(New Fiscal Sociology)'은 조세를 단순한 재정 조달 수단이 아니라, 국민과 국가 간 사회적 계약('fiscal-social contract')으로 봄. 국민이 조세 부담과 정책을 공정·정당하다고 느껴야 국가 재정 정당성이 유지됨.
- 미국은 OECD 중 세수 비중이 낮은 나라로, 증산층이 불공정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.
- 대통령·의회는 세금 감면과 각종 '조세 지출(tax expenditures)'로 정치적 지지를 모았으나, 이는 국민이 정부 역할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고 계층 갈등·정치 양극화·포퓰리즘을 부추김.
- 조세에 대한 신뢰와 납세자 동의(consent)가 무너지면, 재정 압박·사회갈등·재정동원력 약화가 뒤따름.

○ 초부유층의 조세 회피 행동, Marlies Glasius, Sander Van Hapere(University of Amsterdam, Amsterdam, Netherlands)

- 초부유층(민주국가의 상위 100명 억만장자)을 대상으로 '왜/어떻게 조세를 회피하는가?'를 실증 분석.
- 두 가지 설명: ① '할 수 있으니까': 억만장자는 복잡한 재산 구조와 전문가 네트워크로 회피 가능성이 높음. ② '사회적으로 학습했으니까': 조세 회피는 합리적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, 특정 계층 내부에서 '당연하다'고 학습된 문화적 행동.
- 회피행동은 출신국가·산업·세대·자수성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, 조세 정의 논쟁에 '문화적 요인'을 포함해야 함.

○ 복지국가의 유니버설리즘 재개념화, Kaitlin Wannamaker(McGill University, Montréal, QC, Canada)

- 유니버설리즘(보편주의)'은 빈곤·불평등 완화 핵심 가치지만, 개념과 측정 방식이 모호해 연구마다 다른 결론이 나옴.
- 구조(수혜 범위)와 내용(정책 원칙) 두 축으로 보편주의를 개념화.
- OECD 22개국 비교 데이터·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통해, 측정지표(결과 vs 제도) 선택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.
- 개념 정교화와 측정다양성이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, 실질적 정책 설계에 기여함.

○ 조세-사회지출 연계 구조 비교(유럽), Solhee Han(University of Oxford, Oxford, Oxfordshire, United Kingdom)

- 복지국가 연구는 주로 지출 측면에 치우쳤고, 조세와 사회보험(SSC)을 포함한 재원구조 비교는 부족했음.
-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세수·SSC·지출 구조를 군집분석해 조세-혜택 레짐(tax-benefit regime)을 비교.
- 세목 구성·재원조달 방식은 각국의 이념·제도와 연동되어 복지국가의 수직·수평 재분배를 달리함.
- 세입구조와 지출구조를 함께 분석해야 복지국가의 재분배 성격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음.

□ Inequality and growth in contemporary capitalism

○ 성장모델 이론과 여성·돌봄 노동의 연결, Pauline Kohlhase(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, Cologne, North-Rhine-Westfalia, Germany)

- 최근 성장모델론은 '수요 측 성장 동력'을 강조하지만, 무급 재생산 노동(가사·돌봄)의 역할은 간과됨.
- 30개 선진국 분석 결과,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유급 돌봄·가사 서비스 수요가 늘어 국내소비(GDP 대비) 비중이 커짐.
- 공적 돌봄 지출이 많을수록 이 효과가 강함. 반면 남성 가장 모델(가족 내 무급노동 의존)은 소비 기여도가 낮음.
- 가족·재생산 체제 차이가 국가별 성장경로를 만들며, 성장모델 연구는 가족·복지정책까지 포함.

○ 한국: '공유성장'에서 '비공유성장'으로, Jun Ho Jeong(Kangwon National University, Chuncheon, Kangwon, Korea, Republic of.), Byung You Cheon(Hanshin University, Seoul, Seoul, Korea, Republic of.) 외

-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했으며, 성장은 지속돼도 저소득층 소득은 개선되지 않음.
- 가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Atkinson의 일반평균 성장탄력성(GE)을 추정해 결과, 저소득층 소득은 단기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장기적으로 평균 성장률보다 낮게 정체됨.
- 저출산·고령화·IT 기술 변화도 성장 탄력성 약화에 영향.
- 지속적·포괄적 성장의 사다리가 붕괴됐음을 보여주며, 분배구조와 인구구조를 함께 보는 성장정책 설계가 필요함.

○ 조세·급여 구조가 저소득층 순소득에 미치는 영향, Solhee Han(University of Oxford, Oxford, Oxfordshire, United Kingdom)

Oxfordshire, United Kingdom)

- 기존 연구는 저소득층이 '무조건 혜택본다'로 단순화. 실제로는 조세·급여 구조가 복잡해 1~4분위 순 소득에 큰 영향.
- 6개국(덴마크·스웨덴·독일·프랑스·영국·미국) 비교에서 재산세 등은 진보적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부담구조가 다양.
- 소득이 조금만 증가해도 순이익이 빠르게 줄어드는 사례 확인.
- 저소득층 소득불안정은 노동시장 뿐 아니라 조세·급여 제도의 미묘한 설계 차이에서도 비롯됨.

○ 기술변화와 사회투자의 상호작용, Simone Tonelli(University of Bologna, Bologna, Italy)

- 기술 발전은 일자리 양극화·불평등을 촉발함. 이를 사회투자정책이 어떻게 완충할 수 있는지 분석.
- 18개국 패널 분석에서 사회투자 수준이 낮으면 기술변화는 루틴 직종 종사자의 실직·하향 전환으로 이어짐.
- 사회투자가 높으면 고숙련 비루틴 인지직으로 전환(업그레이드)할 확률이 높음.
- 기술변화 대응에는 직업훈련·재교육 등 사회투자정책이 핵심적임.

④	세션 참석 및 전문가 면담
일 시	2025.7.11.(금)
장 소	캐나다(몬트리올, Palais des Congrès)
참석자	김성아 부연구위원

□ The changing politics of economic inequality

○ 프랑스의 정치 재편과 '지배적 사회 블록(DSB)' 가능성, Achille Suty(Centre d'Economie de l'Université de Paris Nord (CEPN) (Université Sorbonne Paris Nord), Villetaneuse, France, France)

- 프랑스는 전통적인 양극 체제가 무너지고 3극화(좌파연합, 마크롱 중도블록, 극우블록)가 고착화.
- 이 구조는 연합이 불가능해 정치 불안정을 키움.
- Amable & Palombarini(2024)의 네오리얼리스트 제도변화 이론을 따라,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변화가 정치 블록 결집을 방해함.
- 각 블록의 확대 전략을 선거데이터로 비교해, 새로운 DSB 형성 가능성을 탐색.
- 프랑스뿐 아니라 스페인·이탈리아·독일·영미권도 유사한 재편 흐름에 있고, 정치위기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맞닿아 있음.

○ 소득불평등: 실제와 인식의 연결고리, Timo Wiesner(University of Bremen, Germany. BIGSSS -

Bremen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, Germany. SOCIUM - Research Center on Inequality and Social Policy, Germany)

- 소득불평등이 커져도 국민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'인지·평가 단절' 논의가 지속.
- 35개국·109국가년 데이터를 다층모형으로 분석한 결과, 실제 불평등이 커지면 인식과 재분배 지지 또한 유의미하게 높아짐.
- 단, 단면효과와 장기효과가 달라 국가별 차이를 설명.
- 불평등 연구는 실제 수준뿐 아니라 인지·평가의 교차적 구조를 고려해야 함.

○ 캐나다: 예산정치와 국민선호의 복잡성, Shannon Dinan(Université Laval, Québec, Québec, Canada)

- 고령화로 건강보험 등 고비용 지출 압박이 커지는 한편,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청장년층의 보호 요구도 증대.
- 그러나 국민 여론조사는 단순 설문 위주라 예산·재분배 선호의 복잡성을 놓침.
- 다차원 설문·선택 실험(conjoint)으로 예산배분 딜레마를 현실적으로 모사.
- 위험 인식, 이념, 신뢰가 국민의 재분배·복지 선호에 미치는 복합적 경로를 검증.
- 예산정책이 국민선호를 반영하려면 제약·우선순위 갈등까지 고려한 조사설계가 필요.

□ Social class and finance

○ Héctor Ríos-Jara(Universidad Central de Chile, Santiago, Chile)

- 미국·콜롬비아·칠레 등에서 학생부채 탕감이 정부 의제로 떠올랐지만 설계·통과 과정에서 정치·법적·기술적 장벽에 부딪힘.
- 보리치 정부는 전체 탕감 약속에서 부분 탕감(500~3,000 USD)으로 목표를 조정.
- 데이터 불충분, 법적 근거 불안, 재원조달 논쟁, 여당 내 불일치가 설계에 큰 제약.
- 부채 시스템의 정치·도덕 경제와 제도적 한계가 탕감정책의 한계를 결정함.

○ Smitha Radhakrishnan(Wellesley College, Wellesley, MA, USA)

- 안정적 수입이 있어도 카스트·지역 이동경로에 따라 공정한 금융 접근이 제한됨.
- 구조적 금융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이 고리채·담보대출에 의존, 이자율 200% 이상.
- “보호된 breadwinner”, “불안정한 breadwinner”, “소진된 breadwinner” 3유형으로 가구의 지속가능성 차별화.
- 채무는 계급·젠더·이동성과 교차하며 가계의 장기 재생산 역량을 소진함.

○ Zosia Cooper(UC San Diego, USA)

- 상향이동 청년층은 가족 자산에 의존하지 못해 투자를 조기 시작하며 계급 프로젝트 수행.
- 고소득층 청년은 가족 지원 덕에 일과 투자 필요성이 적은 반면, 상향이동 청년은 일·인턴으로 번 돈을 투자해 계급 고착을 벗어나려 함.
- 금융화는 계급 재생산의 새 축이 되지만, 이들은 금융시장 변동에 이중으로 취약.

○ Diana Peña Ruiz(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, Montréal, Québec, Canada)

- 이민자는 이주 비용과 취약한 노동시장 지위로 신용접근이 제한됨.
- 이민자는 원주민과 채무 규모는 비슷하지만 상황 곤란·스트레스가 훨씬 높음.
- 이는 백인 이민자에겐 해당되지 않아 인종화된 구조가 드러남.
- 이주 연구는 인종과 금융경로의 교차성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함.

⑤	국가 간 이동
일 시	2025.7.13.(일)-14.(월)
장 소	캐나다(몬트리올 - 토론토) → 한국(인천)
참석자	김성아 부연구위원
캐나다(몬트리올-토론토)공항 출국 및 인천공항 입국	

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, 면담자 명함 등

②~④ 세션 발표 및 학회 참석

